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산지조직 육성에서부터



김병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
본부장

농업이라는 산업의 순기능을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이 오랫동안 회자되는 것은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이러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합리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농업인들의 손톱 밑 가시”라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고, 민선 5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향토문화를 전승하면서 도농상생교류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자는 3농혁신 정책”을 도정 제1의 핵심목표로 삼아 추진 중이다.

농업은 인류가 정주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지속되어온 산업이다. 수천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온 농업의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농업부문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과학기술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의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되풀이 되는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 문제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이다.

이러한 자연재해 문제를 비롯해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문제,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 등이 농업을 둘러싼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다양한 농업문제 중에서 생산자가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안전한 농산물을

OPINION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자가 제 값을 받으면 자연스레 농업소득이 늘어나고, 농업소득이 늘어나면 젊은 농업인구가 유입되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 문제가 해결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농업인이 제 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농산물 소비시장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소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가구 중 1인 또는 2인 가구의 비율이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가구는 대형 할인점보다는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고, 1인용 소량으로 공급되는 간편조리 식품을 선호한다. 농산물 역시 작게 포장한 채소나 과일이 잘 팔린다고 한다. 쌀의 경우도 과거 80Kg 단위의 가마에서 20Kg 포대로 포장단위를 줄여오다 최근에는 10Kg, 4Kg의 소포장이 대세로 변해가고 있다. 소인가구의 증가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트렌드’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 중 26.5%는 슈퍼마켓에서, 25.5%는 재래시장에서,

22.7%는 대형마트에서, 3.8%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이미 슈퍼마켓이 재래시장을 앞질렀고, 비중은 낮지만 인터넷 등 직거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 보고서는 1인가구의 증가와 노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거리쇼핑이 늘어나면서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해마다 1~2%씩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셋째, 우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가기능을 갖춘 기능성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충남농업기술원은 항암배추, 칼슘배추, 비타민C배추 등 기능성배추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건강 중심, 웰빙 위주의 소비지향을 보이는 것도 농업인들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제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 농업인이 애써 키운 농산물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수확 후에 선별을 통한 규격화, 표준화 등 추가적인 상품화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더하지 않으면 제 값을 받기는커녕 생산한 농산물을 팔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농산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농산물 생산현장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 농업의 평균경지규모는 1.5ha로 가족농 중심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규모화를 꾀하여 왔으나 쌀을 비롯한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65세 미만의 농업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농업현장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새로운 도전을 이끌 리더 농업인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산물 소비시장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대부분의 농업생산 현장은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지역에 있는 농협에 방문해 보면 시장에 내다 팔 농산물이 없다고 말하는 농협도 일부 있다. 많은 조합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 물건이 없다는 말은 각각의 농가가 관행농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산물 소비시장은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슈퍼마켓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물량의 규모화, 농산물의 전처리, 소포장 등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영세소농들이 각기 다른 품종을 자기방식대로 재배하고 출하한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농업현장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없

는 것일까?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볼 때, 경지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면 공동생산을 통한 규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작은 마을 단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리더 농업인을 중심으로 품목과 품종을 통일하여, 재배기술을 비롯해 해당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규모화를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 공동선별·포장 후 출하하면 농업인은 일손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농협의 시설을 이용하여 예냉 등 전처리과정을 거침으로써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이 작은 마을단위에 그치지 않고, 읍·면단위로 그리고 시·군 단위로 확대되어 간다면 농업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변화의 좋은 사례가 바로 금산 깻잎이다. 1980년대 후반 소수의 농가가 생산하기 시작한 깻잎은 현재 금산군의 대표 농산물이 되었고, 전국 깻잎 시장의 40%를 금산군에서 생산·출하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산지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농산물 생산을 규모화해야 한다는 것과, 농업인과 농협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화된 농가들이 함께 깻잎을 생산하여 이를 농협에 출하하면 농협은 APC시설을 이용해 세척, 소포장 등의 과정을

OPINION

거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공판장 등 다양한 시장에 출하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농협은 규모화 된 물량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키우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APC시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면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지 농산물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품목을 선정하고,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 공동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직화 한다면 산지수집상의 농간을 배제할 수 있고, 소비시장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금산 깻잎의 사례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닌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육성하고 농협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APC 등의 시설지원도 조직화가 잘 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농협도 정부가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생산자들을 조직화 하는 일에 앞

장서야 한다. 농협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금융소비자의 주권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신용사업 위주의 경영은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지역의 조합원과 농협이 농산물 유통의 주체가 되어 지역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간다면 우리 농업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농업인이 천하의 근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대우받던 시대는 아주 오래전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농업의 중요성이 덜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인구의 노령화, 각종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등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소중한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농협의 역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 사람만 모르는 3가지 진실



권오덕
前대전일보 주필

- ▲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인 줄 너무 모르고
- ▲ 일본과 중국이 무서운 나라임을 모르며
- ▲ 북한이 매우 위협적인 존재임을 모른다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진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첫째는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인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줄 모르며, 셋째는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세계인이 무서워하는 중국 일본 북한을 너무 깔보고 있는 반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너무 낮춰 보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만 잘 모르는 세 가지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한국은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달러를 넘어선지 오래됐지만, 52년 전인 1961년엔 불과 82달러였다. 아무리 화폐가치가 떨어졌다 해도 엄청난 성장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 250여 국가 중 12-13위의 경제대국이다.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고, 외환보유고도 세계 4-5위권이다. 대학진학률 1위, 선박수주량 1위, 초고속 인터넷접속 1위, 자동차생산 5위이다.

인천공항 8년 연속세계서비스 1위, 기능올림픽 단골 우승국이다. k팝과 드라마 한류열풍은 세계를 휩쓸고, 동 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 등 4대 스포츠를 6번째 개최하는 나라로서 스포츠강국이다. 2012년 6월 23일 우리는 마침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20-50클럽국가에 7번째로 가입했다. 일본(87년)이 맨 먼저 가입했고 이어 미국(88년), 프랑스 이태리(90년)순이다.

이어 독일(91년), 영국(96년)이 가입했다.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소득이 안 되고, 소득이 높은 캐나다, 호주 등은 인구가 부족해 당분간 이 클럽에 가입 못한다.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한국의 경쟁력과 잠재력은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고, 삶의 질도 많이 상승했다. 물론 빈부격차 등 개선해야 할 게 많다. 하지만 요즘도 특하면 독재국가 운운

OPINION

하며 여야가 싸우니 우스운 꼴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산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손색이 없다. 이처럼 산수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전국 곳곳에는 아름다운 산하가 널려 있어 문자 그대로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면 이를 쉽게 느낀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웃의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일본을 보자. 일본은 면적이 37만8천 평방 km로 남한의 3.7배, 인구는 1억2천700만 명으로 남한의 2.5배다. 1인 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아직도 반성 없이 극우로 치닫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오늘날의 유럽경제가 있기까지는 2000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일본은 불과 100여년 만에 이루어냈다. 일본은 임진왜란과 한일합병으로 우리의 국토와 주권을 빼앗은 침략국가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은 언제든지 그들과 맞장 뜨자고 덤비고, 심지어는 '썩발이'라고 비하한다.

인류역사상 중국처럼 큰 나라는 없었다. 면적이 960만 평방km로 유럽 23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넓고, 인구 역시 13억 5천만 명으로 대국이다. 20-30년의 짧은 기간에 이토록 대대적인 변화를 겪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지난 2010년 일본을 따라 잡고 2050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함께 G2(Group of 2)로 불리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신흥초강대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인을 짱궂, 뽀놈이라고 비하하며 우습게 안다.

이제 북한을 보자. 그들은 최근 남한과 개성

공동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 발자국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믿기엔 시기상조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핵을 이용한 그들의 장난에 세계는 지쳐있다. 우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 연평해전, 문세광의 육영수여사 시해,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 121사태 등 수많은 침략이 있었지만 남한 국민들의 반응은 너무 무딘 편이다. 그들의 도발과 침략이 일상화 되어 만성이 되어서일까? 남한주민들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아무리 하더라도 미동도 않는다. 북한이 얼마나 큰 위협적인 존재인줄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치료불능의 만성불감증이 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 국내뉴스를 보면 금방 난리가 나는 줄 알지만 귀국해보면 의외로 차분한데 놀라게 된다. 북한의 도발에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주눅 들지 않는 것은 내 세울만한 장점이다. 그만큼 우리의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중국 북한의 실상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항상 대처하는 준비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신문 방송을 보면 당장 경제가 거덜날 것 같고, 사회가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실재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 다만 빈부, 계층, 지역, 세대, 이념 간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국민들의 질서의식제고와 부패근절이 시급한 과제다. 이웃 중국, 일본과의 유대 및 대북관계개선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관건이 될 것이다.